

80% “정상회담 선거용 아니다”

광주일보 인터넷패널 여론조사

96% “지지”...신당·우리당 이득 볼 것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광주·전남 여론주도층 대부분(95.8%)이 찬성 입장을 보이며 환영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지만 10명 중 8명 이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언제든 거쳐야 할 절차라며 ‘선거용’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86.2%는 연말 대선에 이번 회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으며, 회담 개최로 가장 이득을 점파로는 대통합민주신당과 열린

우리당을 꼽았다. 이같은 조사 결과는 광주일보가 제2차 정상회담 평양 개최를 남북 정부가 동시발표한 직후인 8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본보 인터넷 패널 대상 긴급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는 289명의 패널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95.8%가 ‘찬성한다’며 지지를 보였다. ‘반대한다’는 4.2%에 그쳤다. 또 이번 정상회담이 대선을 불과 4

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을 놓고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선거용’ 주장에 대해서는 80.4%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언제든 거쳐야 할 절차’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선용 성격이 짙다’는 응답은 19.6%에 머물렀다. 정상회담이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금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67.7%, ‘많이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8.5%로 전체의 86.2%가 많은 적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는 전방은 13.8%였다. ‘이번 정상회담 개최로 어느 정파가 가장 이득을 볼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53.4%가 대통합민주신당을 꼽아 가장 많았다. 이어 열린우리

당 34.9%, 한나라당 5.3%, 민주당 4.8%, 민주노동당 1.1%, 국민중심당 0.5% 순이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의제는 70.4%가 ‘한반도 비핵화 등 평화체제 전환’을 꼽았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16.4%,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강화’ 12.2%, ‘이산가족 재회 확대’ 1.0% 등이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北에 대규모 SOC 지원 제의할 듯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 9조~13조 예상

오는 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북한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 지원카드가 중점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군비통제, 한반도 평화선언 등 군사분야에서의 긴장완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

이다. 정부는 특히 북측이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아직 남아있는 비전향 장기수의 송환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8면> 정부는 지난해 2월 남북 경협을 위해 북측의 요청 사업을 정리·작성한 ‘북한이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경제협력사업(이하 희망 로드맵)’에 적시된 항목 중 성사 가능성이 큰 것들을 정리해 북측에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가 마련한 ‘희망 로드맵’에는 ▲연간 9억달러(추정) 소요가 예상되는 200만㎾ 송전 ▲총 길이 170km인 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3천77억원) ▲남포항 시설 개선 사업 ▲연산 33만톤 규모의 요소 비료 공장(3천500억원) 등 총 16개 사업이

포함돼 있다. 북한이 희망하는 중유와 경수로를 제공하고,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등 각종 SOC 투자 금액을 포함할 경우 대북 지원액은 향후 수년간 9조~13조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북 전문가들은 남측의 경제지원에 대한 반대 급부로 북측에서는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과 군비 축소를 위한 남북국방장관급회담 정례화 등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9일 “제2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북측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질적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남측대표단이 육로로 갈 수 있도록 북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이미 시험운행까지 한 경의선 열차를 타고 방북하

는 방안을 우리가 배제할 이유는 없다”면서 “방북 경로는 다음 주 개성 실무접촉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성까지 환영 나온 뒤 양 정상은 개성공단을 함께 순방한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상회담 준비기획단(단장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9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준비접촉을 오는 13일 개성에서 진행하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은 경제협력추진위원장을 겸임하는 임영록 재경부 제2차관과 전영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을 포함한 관계부처 차관급 14명으로 구성됐다. 또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며 외교통상부 내 평화체제교섭기획단도 오는 20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연남뉴스

민주신당·우리당 합당

20일까지 마무리...의석 143석 원내 1당

대통합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이 10일 합당에 합의하기로 했다. 양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민주신당 오충일, 우리

당 정세균 의장 주재로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의 기본절차와 일정을 확정했다고 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이 9일 밝혔다.

양당은 이 자리에서 ▲18일 우리당 임시 전당대회 ▲19일 양당 통합수입 기구간 합동회의 ▲20일 선관위 합당 신고 등의 합당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합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통합 방식은 법적으로 흡수합당을 택하되, 정치적으로는 ‘당 대 당’의 대등통합 형식을 살리는 절충안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 2당이던 민주신당(85석)과 3당이던 우리당(58석)이 합당할 경우 의석수가 143석에 달해 한나라당(129석)을 제치고 원내 1당의 지위로 올라서게 된다.

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양당은 경선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을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없으며 내일 중 정치적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더 이상 합당시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20일까지 합당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신당은 양당 합동회의에 앞서 긴급 중앙위원회를 소집, 우리당과의 합당문제에 대한 최종 당론을 결정하고, 우리당은 합동회의 직후 합당절차를 밟기 위한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낼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신당 내부에서 일부 비노(非盧)성향 의원들이 ‘선(先) 중도 통합민주당 합당’을 주장하며 우리당과의 ‘당 대 당’ 합당에 반대할 가능성을 있어 당론 확정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당초 이달 말로 예상됐던 민주신당의 ‘컷오프(예비경선)’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인해 내달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m@연남뉴스



여수 적조 피해

여름철 불청객인 적조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여수시 돌산읍과 남면 등 양식장에서 지난 8일부터 수만마리의 물고기가 폐사했다. 돌산읍 송도마을의 한 어민이 폐사한 양식 쥐치를 건져내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여수=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CATS
‘캣츠’ 타겟 발매중!
2007.8.14 / 2007.8.14
문의: 062)220-1530-1533-0763

우일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m.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LANEIGE V